
신생취약국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남로당의 무장폭동

이주천, 원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신생취약국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남로당의 무장폭동

-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이주천¹⁾, 원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II. 소련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과 남로당

1. 소련군정의 북조선 ‘민주기지화’
2. 박헌영의 남로당과 배후의 소련군정

III. 제주4·3사건의 배경: 유엔 결의 반대투쟁

IV. 제주4·3사건의 6대 쟁점들

1.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성격
2. 제주남로당의 무장폭동의 목적은?
3. 중앙당 지령이 없었나?
4. 부풀려진 피해자 수치
5. 김익렬의 寄稿(기고)와 遺稿(유고)의 진실 논란
6. 단정 수립의 정치적 책임론

V. 결론

* 참고문헌

1) 제주4·3사건정립시민연대 역사수호위원장

I. 문제의 제기: 건국의 배경과 대한민국의 국가체제 성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추축국에 점령당하거나 일제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이 신생국가로서 건국을 했는데, 건국의 절차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내적 선거와 국제적 승인을 거쳐야 했다. 1차, 2차 대전의 비극을 겪으면서 연합국은 항구적 세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모든 국제 문제를 토의할 유엔을 창설하게 된다. 향후 신생국가들은 모두 연합국이 만든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국제사회에서 신생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국제적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건국도 이런 유엔의 승인 절차를 수용하여 오늘날 성장, 발전해 온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유엔이 승인하고 탄생시킨 국가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면서 연합국은 한반도를 접수하면서 북한에는 소련군이 점령하고 남한에는 미군이 점령하여 각각 군정을 실시하였다. 그 당시 1945년 12월, 미영소 외상들의 모임인 삼상회의가 열려 한반도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 신탁통치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서울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미소공위는 공전을 거듭하게 된다. 남한의 우익세력은 반탁운동을, 남로당을 위시한 좌익세력은 소련의 지령을 받고 찬탁으로 급선회하면서 정국은 혼미를 거듭했다. 미군정은 가급적 소련의 협조를 통한 신탁통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그래서 김규식-여운형이 중심이 된 좌우합작 정부를 구상했다. 그러나 남한에서 반탁운동을 주도한 지식들을 신탁통치정부의 각료 인선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소련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1947년 여름 2차 공위에서는 미소 간에 아무런 양보가 없이 완전한 결렬상태가 되었다. 결국 미국은 그 해 가을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고 미군정은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건국을 서두르게 되었다. 국군과 경찰의 병력을 급속도로 증강하기 시작했다.

1948년 5·10총선은 유엔의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결의사항의 이행이었던 것이다. 1월에 총선거를 감독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입국하고 활동을 개시했는데, 북한의 김일성은 국제적 결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위원단의 38선 월경을 거절하였다. 이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김일성이 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구성을 거절한 것이다. 이 배후에는 소련의 스탈린 지령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5·10총선거를 거절하고 통일정부를 방해한 것은 스탈린과 김일성이었지, 트루먼과 이승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건국할 당시부터 신생취약국가(newborn vulnerable state)의 성격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한때 역사학계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적 성격논쟁에서 '파시즘 국가'로 정의한 적이 있었지만, 파시즘 국가는 강력한 무장력을 갖춘 군대와 치밀한 관료제, 그리고 자본가그룹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차 대전을 발발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건국 초기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격은 파시즘 국가도 아니고, 치안의 유지와 국가안보에 국력을 집중했던 권위주의 국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은 남한은 경공업 중심으로 공장 자체도 제대로 돌리지 못했다. 일본인 기술자와 자본가들이 대거 일본으로 탈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체제가 발달하지 못하고 시민사회 역시 형성되지 못했던 한국에서는 시민사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해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피할 수 없고 당장의 치안유지와 질서유지를 통한 체제유지가 가장 긴박한 현안문제로 등장했다. 경찰, 군대, 관료 등의 국가 기구를 통한 강권 지배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기구들 역시 일제 강점기와는 달리 창설 과정부터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충분한 권력자원을 지닐 수 없었다.

요약해보면, 미군정기와 제1공화국 초기의 국가는 국가건설을 위한 모든 자원이 부족했고, 정치적 정통성과 부르주아라는 정치적, 사회적 메커니즘 역시 갖추지 못해 상층부 권력과 하부구조적 권력 모두가 낮았던 취약국가였다. 대한민국이 출범한 이후에도 국가의 구성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1948년에 수립된 정부는 단지 사법상의 국가(judicial state)에 불과했다. 1945년 해방 당시 한국의 문맹률은 78%에 달했고, 대학 졸업자 역시 7,5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했다.²⁾

1948년 당시 산업 생산성은 2차 대전 이전의 80%에 불과했고 높은 인플레이와 식료품 부족, 숙련된 기술자와 전력 부족, 그리고 갈수록 늘어나는 피난민들과 귀국자들로 인해 경제 성장의 전망마저 암울했다.³⁾

해방 이후 한국의 국가기구는 모든 자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건설되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일제강점기의 국가기구와 비슷한 외양과 인적 자원을 구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기구들이 여전히 동일한 실제의 군사, 관료 엘리트들에 의해 지배세력으로 성장했다고 인식하는 것은 과대표장된 것이다. 유능하고 경험 있는 관료의 충당이 어려웠고 치안을 담당할 경찰의 수급과 배치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반일 분위기로 인해 참여를 꺼리면서 효율적인 운영과 임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대부분 모든 신생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치안과 안보문제에 있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국토가 분단된 적대적 상태에서의 국가 형성의 경우 더욱 비중이 크다. 최소한의 치안과 안보가 보장된 이후, 시민사회가 출현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최종적으로 외부 지원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법체계를 바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소련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의 위협 속에서 안보가 극도로 취약한 신생취약국가로서 힘들게 탄생되었다.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도 일본이나 서독에 비해 낮

2) 이택선,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 국가건설의 시대 1945-1950』 (미지북스, 2020), 247-248.

3) 위의 책, 145.

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하루빨리 철군하려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미국의 해외 원조도 한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 비해, 소련군정은 치밀하게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인민위원회 구성, 토지개혁, 북한군대 창설 등으로 북한을 대남진공의 전초 기지로 강화하면서 한반도 공산화 작업을 면밀하게 추진하였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갔고, 이에 반발한 남한의 좌익 남로당세력이 배후의 소련군정을 등에 업고, 무장폭동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의 수립을 정면으로 방해하였다. 반란의 명분은 단독 정부를 반대하고 통일정부의 수립이었다. 여기에서 통일정부란 공산화를 지향하는 통일정부를 일컫는다.

II. 소련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과 남로당

1. 소련군정의 북조선 ‘민주기지화’

미군정이 2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서둘러서 건국 준비에 돌입했다면, 소련군정은 45년 9월 북한에 진주하면서 북한을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위한 ‘민주기지’로 삼아 치밀한 정치 공작을 진행시켜갔다. 북조선인민임시위원회가 1946년 2월에 결성되어, 위원장에 김일성을 앉히고 곧이어 토지개혁에 착수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공산당을 선전하면서 농민들의 환심을 사기에 바빴다.

이미 북한에서는 소련군의 지도하에 1946년 1월 11일 최초의 군대로 창설된 철도보안대가 미군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경찰대로 위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인 1946년 8월 15일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련군이 관여해 간부 장교 양성을 위한 보안간부훈련대대를 창설했다. 1947년 5월 17일, 소련은 보안간부훈련대대를 북조선 인민집단군사령부로 개칭한 후, 전 장병에게 소련군 계급장을 모방한 계급장을 수여하고 소련제 무기를 보급하여 정규군의 모습을 구체화했다. 1947년 7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국제연합에 이관하자, 소련은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설을 선포했다.⁴⁾

제주4·3사건이 발발하기 하루 전인 4월 2일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NSC 8' 보고서는 4만 5천 명의 소련군이 12만 5천 명의 북한 정규군을 양성하고 있는데, 남한의 경우, 불과 2만 명의 주한 미군이 2만 7천 명의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만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⁵⁾ 이렇게 남한의 미군정과 북한의 소련군정은 남북한에서 군대를 양성하는

4) 위의 책, 90-91.

5) 위의 책, 91에서 재인용.

관심도와 지원규모에서 확연히 큰 차이점이 있었다.

2. 박헌영의 남로당과 배후의 소련군정

지금은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이 한반도에 깊게 드리우고 있지만, 1945년에서 1948년에 이르는 해방 정국과 건국 사이의 시기는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제외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다. 소련군정은 스탈린의 지시를 받아서 해방 이후부터 6·25전쟁까지 남한의 남로당을 위시한 좌익공산계열에 끊임없이 파업과 폭동지령을 내렸다. 즉 남한의 파업과 폭동은 자주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소련군정의 지령 하에 이루어진 것이 태반이었다. 1946년 5월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 발생하자 미군정은 조선공산당을 불법화하고 이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 체포령을 내린다. 9월 파업을 주도했던 공산당 지도부는 북한에 주둔 중이었던 소련군 사령부에 파업 방침을 문의했다. 9월 9일 박헌영의 문의에 쉬티코프 사령관은 200만 엔을 지원하고, 임금 인상, 체포된 좌익 활동가들의 석방, 미군정이 정간한 좌익신문들의 속간, 공산당 지도자에 대한 체포령 철회 등의 요구 조건들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투쟁을 할 것을 지시했다.⁶⁾ 이것은 박헌영과 남로당 등 남한의 좌익세력들이 소련군정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예속되었는가를 잘 반증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소련군정의 영향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대목은 남북한 공산당 창당에 소련군정이 깊이 개입한 사실이다. 1946년 7월, 남북한 양쪽에서 좌익세력의 새판짜기 헤쳐 모여가 시작됐다. 소련군정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산당 창당 작업을 서둘렀다. 그리하여 소련 군정의 지시 하에 북에서는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을 합쳐 북조선노동당(북로당)을 창당하고, 남한에서는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 등을 한데 모아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을 결성하는 작업이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반대세력의 저항이 미미한 북한에서의 북로당 결성은 순조롭게 진행돼 8월 28일 창당됐지만, 남로당은 미군정의 탄압과 3당간의 이해관계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남한에서의 합당은 비밀리에 평양과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돌아온 박헌영이 인민당 당수 여운형에게 합당문제를 꺼내고, 여운형이 이에 호응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합당을 계기로 내연해 온 조선공산당 내부의 갈등이 폭발해 반(反)박헌영파와 친(親)박헌영파로 갈라지고 인민당과 신민당도 이에 영향 받아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합당은 물 건너가는 듯했다. 그러나 합당은 그들의 의지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결국 소련의



박헌영

6) 위의 책, 114.

개입으로 1946년 11월 23일부터 이틀간 결성대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남로당 출범이 확정됐다. 소련 군정을 등에 업은 박헌영이 승리한 것이다.⁷⁾

남한 내의 빨치산 부대 활동은 1946년 10월에 시작되었는데, 빨치산 부대의 존재는 소련 군정에게 향후 공산당의 행동 방침을 문의해 온 조선공산당의 보고를 통해 확인된다. 북에 있던 박헌영은 빨치산 부대의 식량과 탄약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면서 향후 투쟁 방침에 대한 교시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군정에 쫓겨서 도주한 좌익세력들 중 일부는 1948년 2월 7일 총파업과 제주4·3사건 이후 전라남도 곡성군과 구례군 일대에서 ‘야산대’로 불리는 무장 유격대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 야산대 중 일부가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이후 군 정규 부대에서 전환한 유격대로 흡수되면서 본격적인 게릴라 활동이 시작된다.⁸⁾

III. 제주4·3사건의 배경: 유엔 결의 반대투쟁

1945년 8월 15일, 한국인들의 해방이 된 기쁨도 잠시 분단의 고통과 함께 1950년 6·25 전쟁까지 그야말로 한국은 내전상태에 있었다. 미군정, 이승만 박사, 그를 지지하는 국군과 경찰은 대한민국을 건국하려고 했으나, 여기에 대항하여 사사건건 건국을 방해하려는 궤방꾼 남로당과의 치열한 혈전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대표적 사건이 바로 제주4·3사건이었다. 무장폭동을 일으킨 제주도 남로도당은 1948년 4월 3일 자정을 기해 한라산 중턱을 중심으로 제주도 거의 전역에서 봉화를 올리고 무장투쟁을 개시하였다. 그 명분은 5·10총선거에 반대하여 소위 한반도 통일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항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주도 민중들도 함께 저항했기에 ‘민중항쟁’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민중항쟁은 흔히 역사에서 마치 부패하고 민중을 억압하는 잘못된 공권력에 대항한 정의로운 민중의 항거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제주4·3사건이 유엔 결의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촉발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⁹⁾

해방된 한국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되었으며, 임시정부의 구성안을 두고 미국과 소련군정이 크게 대립하여 1차 미소공위와 2차 미소공위가 모두 무산되었다. 이에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으며, 1947년 11월 유엔 총회는 한반도 전역에서 유엔 감시 하에 자유총선을 실시하여 남북한 통일정부를 구성하라는 결의를

7) ‘역사속의 오늘’ 조선일보.

http://weekly1.chosun.com/site/data/html_dir/2004/11/24/2004112477005.html (검색일, 2021.8.18).

8) 이택선,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 117.

9) 양동안, 『대한민국 건국전후사 바로알기』 (대추나무, 2019), 116-118

채택하였다. 이에 반발한 소련과 남북한의 공산세력은 유엔 결의의 이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맹렬한 투쟁을 전개했다. 소련은 북한을 먼저 공산화해놓는 전략으로 북한을 '민주기지'로 삼아 차후에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공작을 진행해 왔는데 유엔 결의의 이행은 남한의 공산화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이를 방지한다면 자칫 북한의 공산화마저도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었다.

여기에서 나온 소련의 책략은 한국인들끼리 자주적으로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미소 양군 철수론이었다. 소련은 이를 통해 유엔 결의를 무력화하고 남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려고 시도했다. 북한지역에서는 1946년 2월부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단독정부가 출범해있었고, 북조선노동당(공산당)의 일당독재가 안정되게 실현되고 있었는데 반해, 남한지역에서는 독자적인 정부도 구성되지 못했고, 정치세력들이 좌익, 우익, 중도로 3분되어서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여 정치적 혼란이 심각한 상태였기에, 당시의 한반도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해 볼 때, 소련의 제안대로 이행된다면 한반도는 조만간 공산화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했다. 교활한 소련은 이 점을 노린 것이다.

마침내 유엔 총회의 한국 결의가 채택되자, 소련은 남북한의 노동당에게 유엔 결의를 거부하고 소련이 제시한 방안을 지지하는 군중집회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소련의 그런 지시에 따라 남북한의 공산세력은 좌익 통일전선단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을 앞세워 남북한 각지에서 유엔 결의 거부와 소련 제안 수용을 주장하는 군중집회와 시위를 전개했다. 그러나 좌익의 군중투쟁은 남한지역에서는 그다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유엔 결의가 합리적이어서, 대다수 국민들이 그것을 지지했기 때문이었다.

유엔은 소련과 남북한 공산세력의 반발을 무시하고, 유엔 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1948년 1월초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서울로 파견했다. 서울에 온 유엔위원단이 유엔 결의 이행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자, 소련은 유엔위원단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파업, 폭동, 무장테러를 전개하라고 남로당에 지시했다. 소련의 지시에 따라 남로당은 2월 7일부터 남로당과 민전의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선도하에 전국 각지에서 유엔 결의 거부, 유엔위원단 추방, 남한지역 단독선거 반대 등을 주장하며 파업, 맹휴, 집회, 시위 등을 전개했다. 더욱이 무장한 좌익 인민유격대들은 경찰관서 습격, 전신, 전화선 절단, 철도 시설 파괴 등을 자행했다.

좌익세력은 그 투쟁을 '2·7구국투쟁'으로 작명했다. 유엔 결의가 이행되면 한반도가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조국을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구국투쟁'이라 명명한 것이다. 투쟁 개시일을 2월 7일로 잡은 이유는 소련과 남북한 좌익이 유엔 결의를 격렬하게 반대한 상황에 직면하여, 유엔 결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결정해 달라고 유엔위원단이 유엔 소총회에 요청한 날이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이다.

좌익세력의 2·7투쟁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유엔 소총회는 소련과 남한 좌익세력의 반대투쟁을 무시하고, 2월 26일 유엔 결의를 이행 가능한 지역에서만 이행하라고 결의하였다. 유엔 소총회의 결의는 자유선거가 가능한 남한지역에서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한국인의 독립정부를 구성하라는 것이었다.

유엔 소총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자 남로당과 민전은 유엔 소총회의 결의를 ‘남조선을 식민지화, 군사기지화하려는 미제의 노골적인 단독정부 수립계획’이라고 비난하면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단독선거를 물리적인 힘으로 저지, 파탄내기 위해 무장투쟁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한마디로, 제주4·3폭동은 1947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전개된 남로당과 기타 좌익분자들의 유엔 결의 및 남한 선거 저지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1947년 11월부터 시작된 유엔 결의 반대투쟁에 참여했으나, 강도 높은 투쟁은 전개하지 못했다. 전단지 살포, 소규모 시위, 경찰지서 습격 등에 그치고 말았다. 그 이유는 경찰과 우익 청년단체들의 남로당에 대한 조직파괴 공세로 인해 많은 수의 남로당원들이 구속되어 남로당 제주도당의 투쟁 역량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군정은 유엔 결의에 따른 남한의 선거를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시하기 위해 1948년 3월 정치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 그로 인해 경찰서와 형무소에 구금되어있던 남로당 제주도당의 당원들이 거의 모두 석방되어 당 조직으로 복귀했으며, 제주도당의 투쟁 역량이 급속도로 회복되고 말았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비밀리에 인민유격대와 자위대를 조직하고, 그들을 총기와 수류탄 및 죽창으로 무장시켰다. 이것은 선거를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치르기 위해 공산분자들에게 관용을 베푼 미군정의 선의를 좌익세력은 선거를 저지, 파탄 내는 무장투쟁의 준비에 악용했음을 의미한다.

IV. 제주4·3사건의 6대 쟁점들

한국의 국토 남단에 자리 잡은 따뜻한 섬 제주도에서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한라산 기슭에 있는 여러 오름(岳)에서 봉화가 올랐다. 이를 계기로 무장한 남로당 인민유격대는 도내 12곳 경찰지서를 습격하여 경찰관을 살해하였고, 5·10선거 관계자들을 비롯한 우익단체 인사와 그들의 가족을 테러하는 피의 반란을 일으켰다. 이후 계속되는 선거 방해로 북제주 2개 선거구가 투표자 미달로 선거 무효가 되었고, 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을 암살하고, 11연대 좌익 장병 41명을 탈영시켜 대정지서 경찰을 살해하는 등 만행을 자행하였다.

그 이후 폭동이 진압된 듯했으나, 8월 2일 김달삼이 이북으로 간 후 이덕구가 제주인민 해방군 총사령관이 되어 다시 경찰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자 정부에서는 10월 11일 경비사령부를 신설하고 폭동진압에 나섰다. 11월 2일 9연대 6중대를 제주인민군이 공격하여 하루에 국군 14명 외 다수가 전사하는 등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11월 17일 제주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리하여 폭동을 주도한 남로당의 單選(단선) 單政(단정) 반대 투쟁은 제주에서만 선거 방해의 성공을 거두었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이 전면 개방된 이후에도 한라산에는 남로당의 최후의 폭도들이 여전히 활약하고 있었다. 4·3폭동은 1957년 4월 2일 마지막 빨치산 오원권이 체포됨으로써 만 9년 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오늘날 좌익운동권들은 4·3사건을 자주적 통일정부 구성을 위해 몸부림치며 희생당한 민중항쟁으로 정당화하고 있으며, 많은 한국사 교재에서도 그렇게 기술되어있다. 그러나 정작 4·3사건의 역사적 배경과 제주 남로도당의 배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여 역사적 왜곡이 장기화되고 있다. 2021년 KBS제주방송의 다큐 ‘암살 1948’도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인물들(문상길 중위, 손선호 하사)을 마치 안중근 열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경우와 비교하여 ‘의인’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해방 정국에서 6·25전쟁 시까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소련 스탈린의 야욕과 그의 충견노릇을 마다하지 않은 남로당의 활동을 제외한다면, 남한지역에서의 무수한 폭동과 반란행위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제주4·3사건을 6대 쟁점으로 나누어 재검토해보고, 이를 토대로 좌익운동권들이 주장하는 허구를 지적하고 역사적 진실규명에 더 가까이 다가서 보려 한다.

1. 4·3사건의 성격 논쟁

제주4·3사건의 성격규정은 논자에 따라 폭동, 반란, 민중항쟁, 인민무장투쟁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것은 논자의 입장, 시각, 역사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제주4·3사건 발발 초기에는 폭동론이,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에는 반란론이 우세하였다. 정부는 사건 발발 초기에는 4·3사건을 폭동으로 보도하다가, 정부수립 이후인 11월 17일의 계엄령 선포 시에는 선포문에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하여...”로 표현함으로써 ‘반란’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에 ‘광주 5.18사건’이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되면서 제주4·3사건은 ‘민중봉기’ ‘민중항쟁’으로 불리어지기 시작하였다.¹⁰⁾

폭동론의 경우, 주체를 남로당으로 지목하고, 원인을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설정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한 남로당의 극좌모험주의적 도발(폭동)로 규정한다.

반란론은 주체를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서 우익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항한 좌익의

10) 나종삼, 『제주4·3사건의 진상』, 475.

반란으로 규정함으로써 4·3의 본질을 좌우익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파악한다.

인민무장투쟁론은 주로 공산주의적 관점에서의 입장으로 주체를 ‘남로당과 인민’으로 설정하고 인민의 반(반)제국주의 무장투쟁으로 규정하여 그 배경으로 미제국주의의 침탈에 맞서 인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한다.

한편 민중항쟁론은 위의 3가지 관점과 본질적으로 판이하게 다르다. 이 관점은 주체를 ‘민중’으로 설정하며, 제주 4·3사건을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운동이며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자주적 항쟁으로 규정한다. 남로당은 부차적 존재로 파악된다. 민중항쟁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인민항쟁론과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을 갖는다. 양자 모두 남로당과 민중 또는 인민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前者(전자)가 사실상 ‘민중’을 주체로 보는데 반해, 後者(후자)는 남로당을 주체로 보되 인민과 남로당을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후자가 ‘제국주의와의 대결’로 규정하는 반면에 전자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후자가 봉기목적으로서 ‘인민정부 수립’을 설정하고 있는데 반해, 전자는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은 채 ‘통일(단선단정 반대)’을 내세운다는 점이 중대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제주4·3사건의 성격 규정은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한다. 그렇다면, 제주 4·3사건을 ‘민중항쟁’이나 ‘인민항쟁론’으로 보는 해석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즉 ‘5·10총선 반대와 대한민국 건국 저지’를 위해 무력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민중이든지 인민이든지 이들은 남로당에 의해 조직화되고 동원된, 철저하게 이용된 대상이었을 뿐이다. 한마디로, 제주4·3사건의 주체는 민중도 아니고 인민도 아닌 ‘남로당’이었다.

남로당 중앙당은 제주도당에게 최초에는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의원 선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폭동 지령을 내렸다가 그 후 울구¹²⁾를 통해 경비대 동원을 명령했고, 남로당 제주도당은 장기간 군경을 상대로 전투하면서 친정부 인사들과 경찰 가족을 살해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상징하는 인공기를 게양했고, 대정부 선전포고를 했으며, 국군과 장기간 치열한 전투를 했고, 제주도를 무력으로 장악하여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 했으며, 나아가 육지에서의 무장봉기로 육지가 혼란해지면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적화통일을 하려 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제주4·3사건의 성격은 폭동이 아니라 명확하고 분명한 반란인 것이다.¹³⁾

11) 조남현, 『제주4·3사건의 쟁점과 진실』 (돌담, 1993), 191-193.

12) 조직지도원 (오르그)

13) 나종삼, 『제주4.3사건의 진상』, 481.

2. 제주남로당의 무장폭동의 목적은?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폭동은 우발적이고 제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전면적이었다. 이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나 최소한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감행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가? 또 남로당이 봉화를 올린 것은 단순히 '단선단정 반대'를 위한 것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남로당이 '단선단정 반대'를 통해 추구한 것이 무엇이었나?

더욱이 4·3사건이 발생할 당시 이미 남로당은 총수 박헌영이 북으로 피신하는 등 합법공간에서의 입지를 사실상 상실하고 있었고,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건국될 경우, 남로당은 완전히 근거지를 잃게 될 상황이었다. 결국 결사적으로 남한 지역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다. 즉 남로당의 단선단정 반대, 통일정부 수립투쟁은 공산체제 건설을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남로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남로당이 공산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3·1기념식, 나아가 4·3사건을 일으킨 점은 다음과 같은 지침서에서도 확인된다.

「선전선동 요강」

첫째로, 3·1운동의 원인, 진행, 의의, 교훈 등을 명확하게 해설하여 선전선동할 것. 곧 국제적으로 민족자결주의의 타협노선과 위대한 소련 10월 혁명에 의한 혁명노선의 영향. 국제적으로 일제의 병합 이래의 극악한 반동정책, 노예정책이 이 3·1운동의 원인이 된 것....

둘째로, 우리는 3·1기념식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당의 기본 노선에 결부시켜 광범히 선전선동할 것. 곧 위대한 10월 인민항쟁과 북조선 민주건설이 전국적으로 인민위원회에 정권을 넘기고 인민공화국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해 나가는 것. 민주세력의 기본역량은 노동자, 농민, 근로지식인이라는 것¹⁴⁾(후략).

이 문건에서 나타났듯이, 남로당이 추구한 것은 소련의 10월 혁명 전통에 따른 '북조선식 민주건설'이었고 이것은 곧 공산주의 체제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남로당은 제주도에 봉기하면 남한 각지에서 이에 호응하여 또 다른 봉기가 잇따르고 결국에는 북에서 밀고 내려올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런 예측은 부분적으로는 맞아 떨어졌다. 여수와 순천에서의 14연대 반란사건과 김일성의 6·25남침이 바로 그것들이다.

14) 남로당문건 (1947.2.21.), 『제주항쟁』 (실천문학사, 1991), 12.

3. 중앙당 지령이 없었나?

제주4·3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졌나? 아니면 남로당 중앙당이나 평양이나 모스크바에서 내린 지령에 연계되었는가의 여부이다. 과거에는 제주도당 차원에서 벌인 것이라는 추정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점차 중앙당 차원에서 행해진 일이라는 것이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선 중앙당에서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 박갑동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중앙당이 제주도를 폭동 장소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중앙당의 폭동지령이 떨어졌다. 아마도 그 지령은 3월 중순 쯤에 현지의 무장행동대 두목 김달삼에게 시달된 것으로 안다. 이에 따라 김달삼은 자기 부하 조몽구와 국방경비대 안에서 밀령을 받고 있던 문상길 중위 등과 밀회하여 치밀하게 폭동계획을 짰던 것이다¹⁵⁾ (중략).”

그러나 박갑동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나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한 것이 허점이었다. 고창훈은 『4·3 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에서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회가 단선·단전 반대의 전국적 맥락과 결합시켜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려 감행하였고, 감행이후 도당대회서 의견조정을 거쳐 중앙당에 보고하였고, 중앙당은 이를 조정함과 동시에 전남당부 조직지도원(남도 울구)을 파견하여 지도하였다”고 주장한다.¹⁶⁾ 특히 고창훈은 4월 20일 평양대회에서도 제주도의 상황과 4·3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4·3봉기가 중앙당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에 북로당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을 때이지만 여전히 김일성과 박헌영은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4·3사건은 박헌영의 입장을 강화시켜준다는 점에서, 김일성으로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아예 회피했을 개연성이 크다. 오히려 김일성은 박헌영이 주도한 남반부의 봉기가 실패하기를 내심으로는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김달삼의 급격한 부상도 중앙당의 개입이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김달삼이 제주도당을 주도한 것은 4·3을 전후해서일 일이다. 하위직의 강경파인 김달삼과 이덕구 등이 상위직인 온건파 안세훈, 조몽구, 김유환 등의 무장투쟁 반대를 제치고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것은 중앙당의 개입 없이는 이해되기 어렵다.

그리하여 제주4·3폭동은 남로당 중앙의 지령에 의해 발발했고, 인민무장투쟁의 총지휘는 현지의 제주당위원회 통제 하에 군사부책들인 김달삼, 이덕구, 김성규 등이 담당했으며, 인민해방군(빨치산)의 무장은 일본군이 지하에 매장하여 버리고 간 총기와 탄약 등을 발굴하여 충당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하는 증언이 다시 나왔다. 제주폭동 당시 인민해방군 제2연대장 출신

15) 박갑동, 『박헌영-그 일대기를 통한 현대사의 재조명』 (인간사, 1983), 198.

16) 고창훈, 『4·3 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4』 (한길사, 2006), 277-278.

으로 일본에 망명한 김봉현¹⁷⁾이 일본의 문예잡지 『민도(民濤)』(1988년 여름호 특집II)와의 인터뷰에서 무장투쟁의 지도부에 대해 새로운 증언을 했다. 즉 당시 제주도 인민해방군을 지도한 군사부는 도당위원회의 상부에 위치한 특별기구였고, 이 군사부를 지도한 사람은 중앙에서 파견된 조직책 千檢山(천검산)이라는 인물로 군사이론에 탁월했다고 증언했다. 따라서 제주도당의 전 조직이 천검산의 지도하에 있었다고 한다.¹⁸⁾ 그렇다면 북로당이나 소련 군정기관 이외는 달리 지목할 데가 없다.

결정적 자료로서는 김봉현과 김민주가 공편한 『제주도민들의 4·3무장투쟁사』에 의하면, “박헌영 리승협 도당의 그릇된 전략과 전술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방향으로 오도되었다....그들의 졸당(卒黨)인 김달삼 강규찬은 아무런 승산도 없는 지시를 받아가면서...”¹⁹⁾라는 기록은 박헌영과 리승협 등 중앙당의 지령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기록이다.

요약해 보면, 공산당에 있어서 하부조직이 상부조직의 노선에 위배하여 행동을 실천에 옮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그것도 全面戰(전면전)을 고려한 무장투쟁을 결행하는데 있어서 제주도당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감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남로당 하부조직으로서의 제주도당은 그 정치노선과 전술노선에 있어서 중앙당 노선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해 있을 수는 없었다. 또 다른 의문점은 중앙당의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면, ‘왜 제주의 4·3무장봉기 시에 다른 육지 지역에서 호응이 없었나?’에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4·3사건을 일으켰다고 해도 형편상 전국적인 봉기로서의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제주4·3사건은 남로당 중앙당이 5·10총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폭동 지령’을 내려 발발하였는데, 중앙당은 폭동 지령을 제주4·3 발발 이전에 문서와 구두로 내렸고, 한번은 울구를 통해 ‘폭동에 경비대를 최대한 동원하라’고 지시하는 등 3번이나 폭동 지령을 내렸다.

(1) 문서 지령으로 남로당 중앙당은 제주도당에게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 전역에서 폭동을 일으켜라. 경찰간부와 고위관리들을 암살하고 경찰 무기를 노획하라. 총선거와 군정을 반대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라”는 지령을 내렸다.²⁰⁾ 폭동 지령문이 1월 22일과 2월 12일 등 두 번이나 압수된 것으로 보아 남로당은 폭동지령을 두 번 이상 문건으로 지시하였음이 드러났다.

(2) 구두지령은 2·7폭동이 큰 성과 없이 끝나자 남로당 중앙당은 2월 중순에 이재복을 제주도에 보내²¹⁾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부장 김달삼에게 “UN에 의한 자유선거가 실시되면 우익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는 설자리가 없어진다. 제주도에 폭동을 일으켜서 단선반대투쟁을

17) 조총련 오사카지부 서열 4위, 『조선일보』 A19, 2003.6.17.

18) 조남현, 『제주4·3사건의 쟁점과 진실』, 246-247.

19) 김봉현, 김민주, 공편, 『제주도민들의 4·3무장투쟁사』(1963.12.15), 164.

20) 나종삼, 『제주4·3사건의 진상』, 105.

21) 이재복을 안내하였던 조경순(여.순반란사건의 지휘자 김지회의 처)을 취조했던 빈철현은 2·7폭동이 실패하자 남로당 중앙당은 조직이 온존한 제주도에 단선반대투쟁을 계속하기로 하고 이재복을 파견했다고 했다.

강력히 전개하라”는 구두지령을 내렸다.

(3) 올구를 통한 지령은 전남 파견 올구가 2월 말에 제주도를 떠났다가 복귀하여 3월 15일의 회의시 “國警(국경)프락치는 도당에서 지도할 수 있으며, 이번의 무장 반격에 이것(경비대)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한다”고²²⁾ 지시하였다. 이 지시도 올구가 남로당 중앙당을 방문하고 나온 것으로 보아 중앙당의 지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모스크바에서 지령이 내린 것으로 연계되었는가에 대한 비밀자료도 공개가 되었기에 부정할 사안이 아니다. 1993년에 소련의 비밀 문건 해제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소련의 스탈린이 1945년 9월 20일자로 “북한에 단독정부를 구성하라”는 지령을 내린 사실, 그리고 이 지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던 평양 주둔 소련군 정치담당 부사령관 쉬티코프의 일기 형식으로 된 비망록에 따르면, 소련군정이 김일성의 북로당과 박헌영의 남로당을 완전히 장악했던 실상이 나타나 있으며 1946년 9월의 총파업과 10월 대구폭동시, 남로당 당수 박헌영에게 200만 엔과 300만 엔의 공작금까지 제공하며 투쟁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특히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대구폭동을 앞두고 박헌영이 “당(黨)이 사회단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문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쉬티코프는 “테러와 압제에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를 벌이고 항의집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9월 총파업과 10월 폭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주4·3사건이 박헌영의 지령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²³⁾

4. 부풀려진 피해자 수치

4·3폭동 피해자의 숫자는 1949년 3월 4일자 연합신문에서 처음 발표되었다고 알려진다. 신상준의 <제주도 4·3사건>에는 그동안 피해자 상황을 발표했던 자료가 일목요원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동안 발표된 사망자 숫자는 다음과 같다.

- ① 1949년 3월 4일자 연합신문 : 19,900명
- ② 1949년 9월 1일자 서울신문 : 29,720명
- ③ 1949년 4월 1일 미육군사령부 정보참모부 일일보고서 : 14,000 ~ 15,000명
- ④ 1949년 4월 7일 신성모 국방부장관 기자회견 : 1,668명
- ⑤ 1950년 1월 19일자 자유신문 : 3,240명
- ⑥ 1950년 1월 ‘근로자’ 이승엽 기고문 : 3만
- ⑦ 1950년 7월 ‘인민’ 이기석 기고문 : 3만

22) 문창송 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대림인쇄사, 1995), 76.

23)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4/02/2018040200117.html> (검색일, 2019.6.13).

- ⑧ 1951년 1월 6일 국회 제7차 회의 허정 사회부장관 보고 : 5만
- ⑨ 1951년 1월 23일 국회 13차 회의 강경옥 국회의원 질문 : 5만
- ⑩ 1953년 제주도청 발간 '제주도세 요람' : 27,719명
- ⑪ 1957년 4월 3일 제주신보 : 공비 사살 7,893명, 공비에게 참살당한 양민 1,300명
- ⑫ 1960년 국회 양민 학살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 사망자 1,878명
- ⑬ 1989년 월간 관광제주 : 공비에게 살해된 수 1,288명, 진압과정에서 살해된 수 6,750명/
합계 8,033명
- ⑭ 1995년 제주도4·3피해 1차 조사보고서 : 사망 8,679명, 행불 1,041명, 형무소 행불
870명/ 합계 10,581명(가해자 토벌대 8,909명, 무장대 1,065명, 기타 141명, 분류불능
466명)
- ⑮ 1997년 제주도4·3피해조사보고서 - 수정보완판 : 사망 9,361명, 행불 1,346명, 형무소
행불 958명/ 합계 11,665명(가해자 토벌대 9,674명, 무장대 1,314명, 기타 164명, 분
류불능 513명)
- ⑯ 2000년 제주도4·3피해조사보고서 - 2차 수정보완판 : 합계 12,243명
- ⑰ 2003년 4·3중앙위원회 백서 : 사망자 10,156명, 행불 3,718명, 후유장애자 204명, 수
형자 244명/ 합계 14,322명.²⁴⁾

위 수치를 보면, ④, ⑤, ⑪, ⑫, ⑬번 등을 제외한 번호는 모두 1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4·3사건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제주신보가 조사한 ⑩번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4·3사건의 사망자 숫자는 8~9천 명 근처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4·3중앙위원회가 14년간의 접수 끝에 발표한 사망자 숫자는 10,344명인데 전자와 비교하면 약 1~2천 명의 차이가 난다. 이것은 불량위패가 끼어든 시대상황상의 오차로 볼 수 있다. 이 오차는 희생자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할 불량희생자이거나 아직 생존한 자이거나, 아니면 보상을 노린 가짜 희생자일 수도 있다.

5. 김익렬 寄稿(기고)와 遺稿(유고)의 진실 논란

4·3사건의 진실 공방전에서 가장 논란거리가 심각한 부분이 바로 김익렬 중령의 증언이 담긴 그가 남기고 간 기고와 유고의 진실성 여부이다. 김익렬 중령이 4·3폭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김달삼과 소위 '4.28평화회담'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 '4.28평화협상'은 회유냐 진압이냐의 분수령이었으며, 결국 4·3폭동이 유혈로 치달았다는 점에서 김익렬은 4·3폭동의 책임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의 부하들은 그에게 '평화주의

24) 김동일, 『제주 4·3사건의 거짓과 진실』, 324-333.

자'라는 간판을 달아주었으나, 그의 후임 박진경 연대장을 한 달 만에 암살하고 말았다. 박진경 연대장이 암살당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 열심히 폭동 진압에 나섰다는 것 뿐이다.²⁵⁾

김익렬 중령이 직위 해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김익렬의 유고에 따르면, 조병옥이 그의 부친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면서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조병옥은 독립운동가요 미국유학파로서 해방 정국에서 뛰어난 통찰력으로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꿰뚫고 있었던 선각자 중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조병옥은



제주 비행장에 도착한 미군정 수뇌부. 왼쪽 두 번째부터 군정장관 딘 소장, 통역관, 유해진 제주도지사, 맨스필드 제주군정장관, 안재홍 민정장관, 송호성 총사령관, 조병옥 경무부장, 김익렬 9연대장, 최천 제주경찰감찰청장. 이날 제주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조병옥 경무부장과 김익렬 연대장 사이에 육탄전이 벌어졌다. (1948.5.5.)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대한민국의 건국에서 좌익들의 저항을 분쇄하는데 앞장서서 국가의 초석을 놓은 지대한 공로자이다. 이런 인물이 김익렬의 부친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면서 거짓말로 인신공격을 했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 조병옥은 남한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총수로서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만약 조병옥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김익렬로서는 반론을 제기하여 조병옥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몸싸움을 하다가 상황이 정리된 이후, 딘 장군의 요청으로 조병옥은 다시 단상에 올라가 김익렬이 공산주의자라는 설명을 했다. 김익렬은 조병옥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그는 조병옥의 연설이 끝난 후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었다. 김익렬은 조병옥의 연설을 방해하는 행

25) 위의 책, 145-147.

동을 보였고 김익렬은 상당한 궁지에 몰렸다. 김익렬의 유고에서는 조병옥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에게 불리한 부분이길래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을 것이다. 더구나 김익렬과 김달삼은 친구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다. 김익렬이 언제 친구 김달삼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익렬은 말년에 4·3폭동 당시 협상장에서 만났던 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이 복지산 학교의 친구였다고 떠벌리고 다녔다.²⁶⁾

김익렬은 유고를 쓰기 이전인 1948년 8월 6일 국제신문에 김달삼과의 협상에 대한 기고를 했다. 그리고 유고는 1970년대에 작성되어 1988년 12월 김익렬이 사망한 이후 발표되었다. 즉 김달삼과의 협상내용은 기고와 유고라는 두 개의 문건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상이한 점이 많길래, 하나의 사건에서 두 개의 발언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하길래, 그것들은 진술을 무수하게 반복하였기에 후세의 독자들을 더욱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김익렬은 변명과 거짓말을 많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김익렬에 대한 진실 공방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기고와 유고의 집필 동기도 상이하다. 기고의 목적은 “인민군사령의 정체에 대해 전투지휘가 상당히 능하느니 하는 사실 아니 사실에 불만을 느끼고 그릇된 선전을 시정하려는 의미에서” 라고 하는 반면에, 유고의 목적은 “사가들이 맹목적으로 제주 4·3사건을 공산당의 사전 음모에 의한 우리나라 공산화를 위한 여순, 지리산 등지의 공산반란과 같은 사건으로 단정짓기에 후세 사가들이나 제주도민들이 정확한 역사를 아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²⁷⁾

기고와 유고의 관점이 다르기에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만큼 김익렬은 거짓말을 많이 한 것이다. 특히 김익렬의 유고는 왜곡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만, 4·3폭동에서 좌익들이 숭상하는 중요 문건이다. 4·3정부보고서에서도 유고는 진실을 왜곡하는 도구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4·3폭동의 유형은 협상이 파기되었기 때문이고, 협상 파기의 주범은 경찰과 우익이라는 논리다. 4.28평화회담은 점차 미화되고 윤색되어서 김익렬을 평화의 화신으로 만들었다. 후대의 남한 좌익들이 4·3폭동에 대해 대한민국과 우익진영을 매도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김익렬의 왜곡에서 출발한다. 김익렬은 평화를 주창하고, 성사시켰는데, 폭력적 정권이 일부러 강경진압을 감행하여 희생자를 양산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원래부터 성사된 평화회담은 존재하지 않았다.²⁸⁾

26) 더 자세한 내용은 김동일, 위의 책, 165-173.

27) 김동일, 위의 책, 175. 기고와 유고의 상이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김동길, 위의 책, 174-183.

28) 김익렬의 평화회담의 허구성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김동일, 『제주4·3사건의 거짓과 진실』, 184-191 참조.

6. 단정 수립의 정치적 책임론

한마디로 제주4·3폭동을 일으킨 주동자들의 봉기 동기는 미군정이 협조하고 이승만이 강력하게 주장한 5·10총선거를 통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의 노선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정부를 이루지 못한 남북분단이 이승만의 책임인가? 과연 남북한 누가 먼저 단독정부를 재촉했던 것일까?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점령하여 각각 군정을 실시하였다. 소련은 이미 북한에 단독정부를 수립할 결심을 굳혔다. 9월 20일 스탈린은 북한에 독자적인 정권을 세우라는 취지의 비밀지령을 제1극동군 사령관 바실레프스키에 내렸다. 그에 따라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북5도행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산하에 이북5도의 행정을 총괄하는 10개 행정국이 창설되었다. 그와 동시에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창립되어 오늘날 조선노동당의 전신이 되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의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며 장차 한반도에 들어설 임시정부의 수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소련은 그 이전에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공산주의자들이 토지개혁 등의 사회개혁을 추진하여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도록 지시하였다. 김일성은 소련군이 점령한 38도선 이북에서 혁명을 먼저 수행하여 북한을 '민주기지'로 만든 후에 한반도 전체로 혁명을 확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방침 하에 1946년 2월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한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 등을 골자로 한 공산주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무상으로 분배된 토지에 대해 농민은 경작권을 가졌지만, 소유권은 없었다. 그럼에도 토지개혁은 농민의 환영을 받았다.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통한 북한의 급진적인 개혁은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남한의 미군정과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인해 남북한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토지개혁을 시행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사실상 북한지역을 통치하는 단독정부의 행세를 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11월 도·시·군 인민위원 선거를 거쳐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리하여 북한은 남한에서 미군정과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단독정부를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훨씬 전에 이미 단독정부를 세운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²⁹⁾

북한지역에서 이미 단독정부 수립이 한창 추진되고 있던 1946년 남한은 신탁통치문제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남한은 일본이 항복했으나, 미군은 아직 진주

29) 교과서포럼, 『한국현대사』 (기파랑, 2008), 181-182.

하지 않은 힘의 공백 상태에 있었다. 이런 공백을 선점한 것은 건국준비위원회와 세력을 결집한 공산주의자들이었다. 9월 8일,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군정은 어떤 조직의 정부형태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38도선 이남에서는 미군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선언하였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일정기간동안 한반도에서 신탁통치를 결정했지만, 그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일제가 패망한 이후, 미국과 소련은 냉전에 돌입했으며, 양국 간 협력의 여지는 처음부터 적었다. 1946년 3월부터 5월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이를 말해 준다.

이에 미군정은 김규식과 여운형 등 온건한 중간파 세력이 결집하도록 좌우합작운동을 지원하였다. 현실적으로 해방공간에서 중간파 세력이 크지 않았기에 좌우합작이 성공할 가능성은 적었다. 북한을 통한 한반도의 공산화 책략에 위기를 느낀 이승만은 1946년 전국을 순회강연하면서 소련 공산주의 책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단독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46년 6월 이승만의 정읍발언은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소련 간의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국내적으로는 이미 북한에서 사실상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한에서도 불가피하게 그에 준하는 대응책으로 단독정부를 수립하여 북한지역을 공산화하고 있는 소련에 맞설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해 12월 4일, 이승만은 급기야 도미 여정에 올랐으며, 자신이 직접 미국정부를 설득하여 남한만이라도 정부수립(건국)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결심하였다.

이승만이 대미외교에 전념하고 있던 그 당시의 국제정세는 1947년 3월에 발표된 트루먼 독트린이 밝혔듯이 이승만의 정세판단이 정확했음을 입증한다. 트루먼독트린은 미국이 소련과의 대화나 협조적인 자세를 버리고 대소봉쇄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었다. 이는 그리스와 터키가 공산세력의 위협에 직면하여 소련의 세계적화 전략에 맞선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책이었다.

신탁통치를 논의하고자 1947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겼다. 그해 11월 유엔은 한반도에서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며, 이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남한에 파견하기로 결의하였다. 1948년 1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남한에 들어왔다. 그러나 소련의 거부로 북한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2월, 유엔은 “선거감시가 가능한 지역”, 즉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미군정은 이를 수용하여, 그해 5월 10일 남한에서의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결국 정리해보면, 분단의 책임을 놓고 볼 때, 가장 큰 원인은 냉전체제에 있었으며, 미소 양국에게 일단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태의 진척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1차적인 책임은 소련 측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은 북한 점령시기 처음부터 공산화 작업에 착수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지배권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분단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만약 남한에서 단독정부가 추진되지 않은 채 계속 시간만 지체되었다면, 미군정의 갈팡질팡하는 한반도 정책의

와중에서 결국 한반도는 미군이 철수한 이후 강력한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지 못하고 좌우합작의 연립정부가 수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었다면 남한은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제주4·3사건의 폭동 주동자들이 주장한 “공산화라도 통일정부면 무조건 찬성한다”는 식의 통일지상주의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이승만의 단독정부 요구는 시대적 상황으로 고려해 볼 때,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오히려 역사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남로당의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소련이었다는 등식이 성립된다. 공산주의 이념의 실체도 제대로 모른 채 4·3사건의 流血(유혈)의 회오리바람에 휩쓸린 제주도 민중들은 최대의 피해자가 되었다. 물론 억울하게 죽어갔던 제주도민들의 희생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만, 군경 토벌대의 강경진압을 문제 삼기 전에 먼저 건국을 무장폭동으로 방해한 남로당의 반란행위를 준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고 그들의 반란행위가 역사적 평가에서든지, 어떤 법적인 방식으로든지 평화나 상생이란 미사여구로 미화, 찬양, 정당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V. 결 론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불과 3년 만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그로부터 어언 73년이 지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신생국가가 탄생되었지만, 대한민국처럼 단기간에 건국-산업화-민주화를 달성한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선진국의 경우, 산업화 과정만 하더라도 100년 가까이 걸렸다는 점에서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성취의 발자취에는 건국의 과정에서 흘린 선열들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특히 국군, 경찰, 또 북한에서 내려온 서북청년단을 위시한 애국지사들의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의 광풍 이후 해이해진 좌경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건국의 선각자들의 피와 눈물의 삶의 궤적을 망각하고 말았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건국사를 망각해버린 생각 없는 국민이 된 것이 아닐까?

1948년 건국 당시 대한민국은 자원과 물자, 그리고 국가경영의 인재 등 모든 것이 부족한 그야말로 신생취약국가였기에, 언제 붕괴될지 알 수 없는 국가였다. 미군정도 하루빨리 철수하기를 원했고, 미 전략가들이 바라보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서독과 일본에 비해 형편없이 저평가되었던 시절이었다. 미군정은 1947년 7월 제2차 미소공위가 무기한 연기되자 소련과의 좌우합작 정부 구성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건국

작업을 서둘렀다. 그리하여 군대와 경찰조직이 증강되고 미국의 원조가 강화되었으나, 소련의 북조선에 대한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과 비교해 보면 빈약했다. 그러므로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한 대한민국은 언제 붕괴될지 알 수 없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그야말로 신생취약국가였다.

특히 남로당을 위시한 좌익계열은 파업, 폭동 등으로 사사건건 건국을 방해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비극적 사건이 바로 제주4·3사건이었다. 제주4·3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내부의 남로당 프락치 존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숙군작업에 들어갔으며, 다행스럽게도 이 숙군작업으로 6·25 전쟁 시 군내부의 혼란을 겪지 않게 되었다. 물론 그 와중에서 좌익의 선전선동에 본의 아니게 동조하여 억울하게 죽어갔던 민중들의 낮은 위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폭동과 반역의 주동자인 남로당원들에게 철저히 그 과오와 책임을 물어야 하는 냉정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은 자주적 통일정부의 구성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무장투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적 조국은 소련이었고, 스탈린에 충성을 맹세한 스탈린주의자였다는 점에서 일말의 동정심도 표할 수 없다.

건국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던 제주4·3사건에 대한 올바른 정립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크게 연관이 있다. 오늘날 날로 훼손되어가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의 위기를 고려해 볼 때, 제주4·3특별법 통과에서 보듯이 제주4·3사건의 역사 왜곡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건국이념을 더욱 훼손, 침해할 것이고, 건국의 정통성이 부정되면서 건국에 헌신적으로 희생했던 분들의 노고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되었지만, 제주4·3사건은 역사적 성격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던 무장폭동의 반란이었음이 명백하다. 4·3폭동의 주체 세력은 문맹의 노동자 농민이 아니라 사회주의(공산주의) 신념을 가진 상당한 지식층들이었다. 이들의 선언문이나 폭동의 행동거취들은 4·3폭동이 경찰이나 서청의 탄압에 저항하여 일으킨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위한 신념의 폭동이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투쟁방식도 단순히 경찰을 공격한 것을 넘어서서 군사조직을 갖추고 계획적으로 대한민국에 저항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확실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호도하면서 마치 공권력이 죄가 없는 제주도민들을 학살한 것처럼 오도되어왔다는 점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좌익정부가 연이어 등장하면서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내동댕이치고, 정권의 입맛대로 역사를 재단하려고 했다. 역사적 문제를 학자들이 연구와 토의를 거쳐 학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표심을 의식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힘이나 다수결로 해결하려는 무모함이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해방 정국에서 시작된 좌익과 우익의 갈등, 투쟁은 7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쟁 양상은 역사학을 비롯하여 전 문화현상으로까지 확대되어가는 역사전쟁의 광역화 현상이 도처에서 목도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왔던 체제수호세력은 역사전쟁에서 패하는 상황에 있다. 어느 여당 대선후보자는 “대한민국은 친일파

와 미군정이 세운 나라”라는 식으로 반일선동의 역사전쟁을 선포하기까지 하면서 지지층을 긁어모으려고 광분했다. 대중의 반일정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책략은 선거철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면서 국익의 훼손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대중의 표심을 자극한다. 제주4·3사건특별법의 통과를 보면서 이제부터라도 시민단체와 애국지사들이 앞장서서 역사의 좌경화를 막고 올바른 역사적 진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문승, 『제주사람들의 설움』, 신아문화사, 1991.
교과서포럼, 『한국현대사』, 기파랑, 2008.
김동일, 『제주 4·3사건의 거짓과 진실』, 비봉, 2016.
김봉현, 김민주, 『제주도민들의 4·3무장투쟁사』, 문우사, 1963.
나종삼, 『제주4·3사건의 진상』, 아성사, 2013.
문창송(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대림인쇄사, 1995.
박갑동, 『박현영-그 일대기를 통한 현대사의 재조명』, 인간사, 1983.
양동안, 『대한민국 건국전후사 바로 알기』, 대추나무, 2019.
이선교, 『제주 4·3사건의 진상』, 현대사포럼, 2010, 5판.
이택선,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 국가건설의 시대 1945-1950』, 미지북스, 2020.
조남현, 『제주4·3사건의 쟁점과 진실』, 돌담, 1993.

2. 논문

- 고창훈, 『4·3 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4』, 한길사, 2006.
남로당문건(1947.2.21.), 『제주항쟁』, 실천문학사.

3. 인터넷

http://weekly1.chosun.com/site/data/html_dir/2004/11/24/2004112477005.html.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4/02/2018040200117.html>